

美민주당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 탄핵 절차

펠로시 하원 의장 ‘헌법 위반’ 리 스캔들 이어 대선 대항 뇌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영향 주목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명운을 건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전격 돌입함에 따라 ‘트럼프 탄핵론’이 메가톤급 뇌관으로 부상, 미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급격히 빠져들게 됐다.

특히 이번 탄핵 추진은 ‘현직 대통령’ 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정면충돌 구도를 띠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탄핵 추진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탄핵론은 수개월간 표류해온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발표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다자외교부대인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한 날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당한 통화를 통해 취임선서 및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성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비공개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며 “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고결성과 법의 통치에 대한 존중, 헌법 수호에 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하며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이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게 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 추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의혹의 파문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

었다고 보고 전격 선회했다.

펠로시 의장이 마음을 바꾼 것은 진영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으며 며칠사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탄핵 여론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이번 사건의 성격도 탄핵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론에 가세했다. WP는 하원 민주당 의원 235명 중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이 16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

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고 미언론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도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문제란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인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관여하던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레이드터’에 올려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는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의 하원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상원 문턱까지 넘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로 취임 이래 약 2년간 발목을 잡았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물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며 탄핵론을 털어낸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탄핵론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연합뉴스

아베 “조건없이 김정은 만나고 싶다”

유엔 연설서 재차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다시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반토론 연설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결의다(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북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을 일본은 지지한다”며 “정상끼리 흥금을 터놓고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북한을 둘러싼 역학(구조)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2012년 이후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총리는 올해까지 7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염두에 두고는 “유엔 설립 후 75년이 지났다. 안보리 이사국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2022년 일본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글로벌 슈퍼리치 “내년 경기침체 돌입 전망”

“현금 늘리는 등 대비 작업”

평균 1조4천억원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초부유층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임원 중 절반 이상이 내년 경기침체 돌입을 전망했으며 다수가 이미 대비를 시작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투자은행 UBS와 캐뉘웰스 리서치가 전 세계 360개 패밀리오피스의 임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5%는 내년 말까지 글로벌 경제가 경기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패밀리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배분·상속·증여·세금 문제 등을 전담하는 업체로, 이들의 의견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창구로 여겨진다. 패밀리오피스 임원 중 45%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채권과 부동산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 전략

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금 보유액을 늘렸다는 답변은 42%였으며 투자 내에서 차입 위험노출액(레버리지 익스포저)을 줄였다는 응답도 22%였다.

패밀리오피스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은 평균 17%를 차지했다.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요인으로는 응답자 91%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꼽았다.

응답자 63%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처로서 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84%는 내년까지 포퓰리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답했으며 87%는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사업에서 향후 가장 큰 지장을 주는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투자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트럼프 “마녀사냥 쓰레기”

민주당 탄핵절차 돌입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마녀사냥 쓰레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탄핵절차 돌입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에서 이렇게 중요한 날, 그렇게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공, 그리고 민주당은 더 많은 ‘마녀사냥 쓰레기’ 긴급뉴스로 그것을 고의로 망치고 손상시켜야 했다”며 “나라를 위해 너무 나쁘다”고 비난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맥신 워터스 금융위원장을 거명한 뒤 “당신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진에 갈라진 파키스탄 동북부 도로 24일(현지시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파키스탄 동북부 미르푸르의 외곽 도로가 크게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 전후 김정은 위원장 방중설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6일을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설이 다시 파지고 있다.

이는 중국 투먼(圖門) 등 북·중 접경 지역 경계가 최근 강화되고 북한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중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부는 임박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 25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두만강 상류인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과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최근 공안 등의 단속이 강화됐다.

한 소식통은 “10월 1일 신중국 70주년 국경절 기념일을 맞아 중국 공안의 경계

가 강화했다는 말이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방중을 대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4차 방북 당시 전용 열차로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났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열차로 중국 내륙을 관통하는 등 전용기보다는 열차를 선호해 철로가 이어지는 북·중 접경 동양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집사’로 불리며 의견을 담당하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조만간 방중한다면 김 위원장의 수교 기념일 전후 방중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月)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오늘조회: 5 2주누적: 207 2주평균: 15
토지면적	19835㎡ (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구분
건물면적		보증금	(10%) 119,900,000원	1차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2차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1,198,971,000원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매각토지 건물현황(감정원 : 인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 2018.11.29)						
목적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